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김민(진보네트워킹센터)

세션명	워크샵7.사이버보안과 민주적 거버넌스			
일시	2019.7.5.(금) 15:15~16:45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조지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	발제	
	패널	오병일(진보네트워킹센터 대표)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플로어	약 20명 참여			

제안내용	<p>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략은 주로 큰 사고가 터진 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만들어져 왔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부족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와 변화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p> <p>사이버 공간의 위협이 국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이버 공간을 전통적인 안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세계 주요 국가들 또한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보안 그리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허나 한국의 경우 이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특히 이용자와 시민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이 부재했습니다.</p> <p>사이버 보안 정책과 전략에 대해 말하는 것은 단지 정책 결정자나 기술자의 몫이 아닌, 관련된 모든 이해되어야 함을 생각하고 고민해봐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국가주도 사이버 보안 전략과 그 이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p>
요약내용	<p>본 워크숍에선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구체적 정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현재까지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p> <p>패널로 참석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킹센터 대표의 경우 정보기관 중심의 현 사이버 보안 체계에 대한 문제, 종합적 전략 부재,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의 사이버 보안 인식 등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어서 권석철 큐브피아 대표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국가의 정보 수집 및 통제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며 역효과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사이버 보안 또는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온라인 상의 데이터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의 경우,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현재처럼 무차별적으로 정보 접근과 관리를 총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보호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디테일을 갖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현재 법적인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어떤 논의가 필요한가를 시작으로, 해외의 사례를 짚어가며 거버넌스 형태의 장단점을 말했습니다.</p>

논의 세부 내용

각 패널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기본 문제의식과 생각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여 사이버 보안 또는 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국정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주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권석철 대표는 민간업체 실무를 예시로 들며, 해킹 사고에 있어 본인들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국방부나 민간업체들을 불러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보와 자료가 활용되고 위해선 각 부처와 기관 등과 공유가 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공된 정보만 수직적으로 내려가는 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승주 교수는 사이버 시큐리티의 영역에서 인력과 기술력 때문에 정보기관이 담당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며,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전자적인 ‘데이터’에 대한 분류체계를 갖추어 어떤 데이터가 국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데이터가 기밀인지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에 있어서는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쪽으로 가야 논의가 발전적으로 갈 것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앞에서 나온 지적들을 토대로, 국정원이 전체를 담당하기보다는 어떠한 일원으로, 그 영역과 직무를 명확히 명시한 다음에야 그 협업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병일 대표는 국정원 비판은 국정원이 모든 것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것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국정원 개혁과 해외정보기관으로써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역할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석철 대표는 위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최소한 국정원이 필요한 정보만 취득을 하고 나머지 정보는 다른 기관들과 투명하게 협력하는 관계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주 교수는 추가적인 의견으로 국정원이 아닌 다른 곳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야 한다면 실행력과 힘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예산집행권을 맡기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기업의 주된 분위기인 사고가 나면 쉬쉬하는 문화를 지적하며, 현재로써 모든 공격을 다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것을 원상태로 빠르게 복구하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이버 보안 전체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과, 그 컨트롤타워에 집행력과 실행력 등의 실질적 권한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투명한 정보공유와 개념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분산의 필요성에는 패널들 모두 동의했습니다.